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이금순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소장)

이규창 (남북통합연구센터연구위원)

한동호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홍민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CONTENTS

제8권 2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인 쇄 2014년 2월
발 행 2014년 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전 화 (대표) 02-900-4300
(직통) 02-901-2528
(팩스) 02-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전화 02- 786-2999

<비매품>



| 국제사회 동향

- 1. 개별국가 3
- 2. 유엔과 국제협력 9
- 3. NGO 및 기타 14
- 4. 분석 및 평가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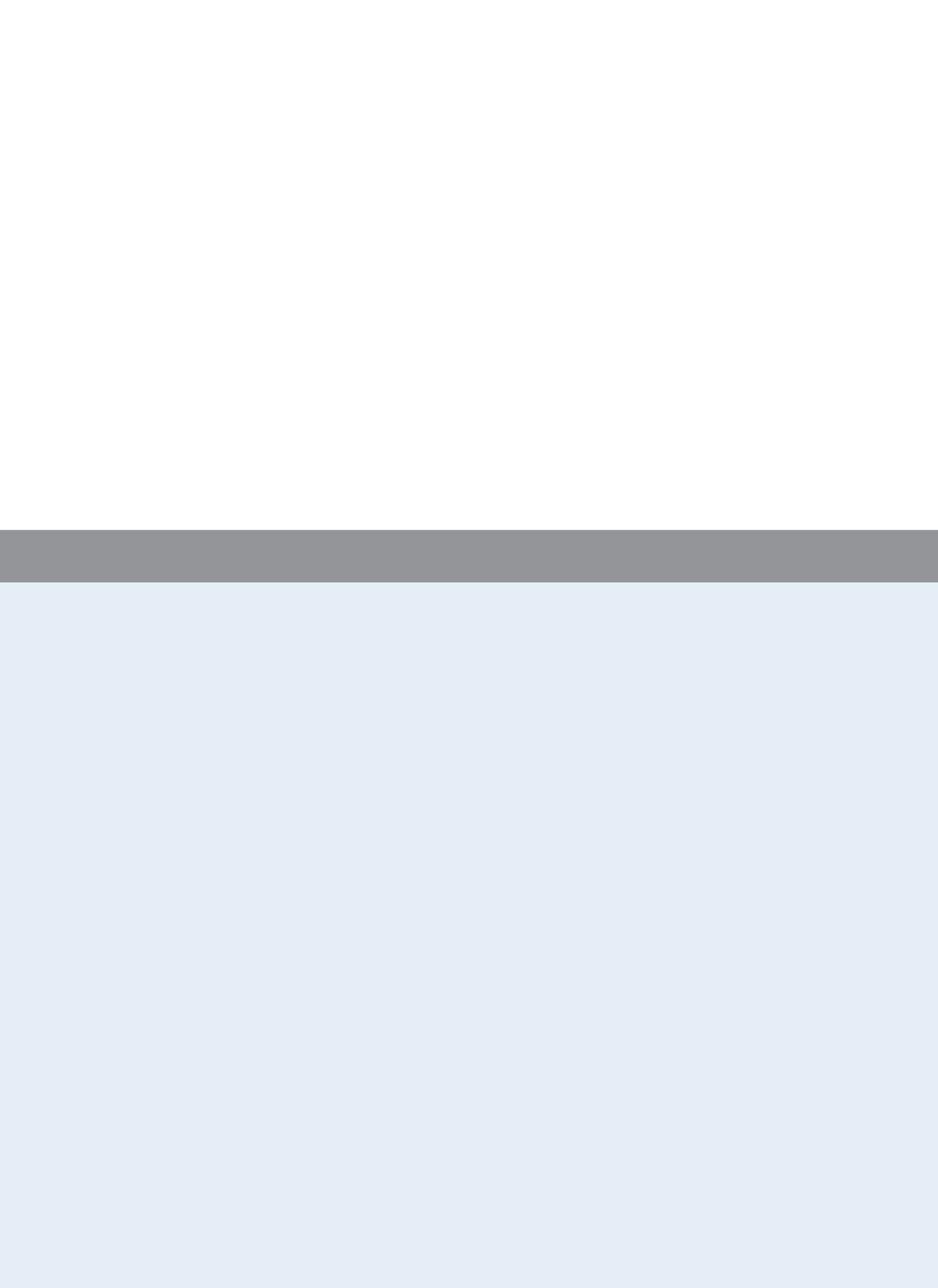
| 북한의 대응

- 1. 미국에 대한 반응 31
- 2. 일본에 대한 반응 32
- 3.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반응 34
- 4. 남한에 대한 반응 36
- 5. 분석 및 평가 39



| 인도주의 사안

- 1. 탈북자 45
- 2. 납북자 60
- 3. 국군포로 64
- 4. 이산가족 65
- 5. 분석 및 평가 68





1. 개별국가	3
2. 유엔과 국제협력	9
3. NGO 및 기타	14
4. 분석 및 평가	26

1. 개별국가

가. 미국

미국 농무부, '식량안보평가 2013~2023' 보고서 발표

-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는 '식량안보평가 2013~2023'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이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7.1)
 - 주민 90%의 섭취 영양분이 식량농업기구(FAO) 권장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식량부족 상황이라고 지적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북한 특권층, 주민 고통 외면"

- 에드 로이스(Edward Randall Royce)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의 한인 기독교인들이 의회 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햇불집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고위층들이 민생과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채 자신들만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발언(7.18)

미국 인구참조국, 북한 인구 통계 발표

- 미국 인구참조국(PRB)이 자유아시아방송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북한 전체 인구는 2,470만 명이며, 유아 사망률 감소와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북한 인구의 지속적 증가를 전망(8.22)
 - 올해 북한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69세로 남성은 65세, 여성은 73세
 - 유아 사망률은 2011년 1천 명당 32명에서 2013년 27명으로 감소
 - 국제사회의 지원에 따른 영양공급과 의료환경 개선이 북한의 평균수명 상승, 유아 사망률의 감소 등을 가져왔다고 분석

미국 북한인권특사, 방한 및 샤이오 인권포럼 기조연설

- 로버트 킹(Robert King)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방한해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인권 및 인도주의 사안에 대해 논의
 -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제3회 '샤이오 인권포럼'의 기조연설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로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지적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환기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조(8.28)

오바마 대통령,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 조치 미흡 국가로 재지정

-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와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희생자보호법에 따라 북한을 인신매매 피해 방지가 미흡한 국가로 재지정한다는 결정사항을 존 케리(John Kerry) 국무장관에게 전달(9.17)
 - 인신매매 희생자보호법에 따라 북한은 콩고민주공화국, 이란, 수단, 짐바브웨 등과 함께 미국 연방정부의 2014 회계연도 자금 지원 금지대상에 포함
 - 인신매매 희생자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 방지 노력이 부족한 나라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대외원조자금 지원을 금지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관심 촉구

- 로버트 메넨데즈(Robert Menendez)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설립 3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11.15)
 - 북한 핵 문제만큼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북한의 변화를 위한 압박의 강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

미국 북한인권특사,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인권 논의

-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방한해 외교부와 통일부 정부 당국자들을 두루 만나 북한인권 관련 사안을 논의(11.17)

나.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

캐나다 외무장관, 북한 정권수립 65주년 성명에 인권 문제 지적

- 존 베어드(John Baird) 캐나다 외무장관은 북한 정권 65주년에 대해 "65년 동안 북한 주민은 깡패 정권 아래 고통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공식성명을 발표(9.23)
 - 베어드 장관은 "강제수용소의 존재, 불법감금, 강제낙태, 연좌제 처벌, 정치범의 무법 억류, 근로자 착취,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총체적인 자유의 부재 등 진실로 비참한 국가"라고 지적

캐나다 정부, '북한인권의 날' 지정

- 캐나다 정부는 '북한인권의 날(Human Rights in North Korea)'로 제정하고 토론토와 오타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9.28)
 - '북한인권의 날'은 캐나다 북한인권협회의 대정부 청원으로 협의회가 정하고, 캐나다 정부가 공인하는 형식으로 제정
 -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캐나다 복합문화장관 겸 고용 및 사회개발장관은 21세기에도 강제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상기시키기 위해 '북한인권의 날'을 제정했다고 언급

영국 하원, 북한인권 청문회 개최

- 영국 하원은 피오나 브루스(Fiona Bruce) 하원의원의 주재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11.21)
 -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BBC의 한국어 방송 개시 등 북한인권 개선 관련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으며, 국제앰네스티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동아시아담당 연구원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설명

일본 납치문제담당상, COI 임기 만료 후에도 일본 정부 지원 의사

-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일본 납치문제담당상은 2014년 3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북한인권 관련 조사활동에 일본 정부가 자금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12.20)
 - 이 발언은 일본의 대북인권운동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加藤健) 대표가 일본인 납북자 가족과 함께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담당상과의 면담을 가졌을 때 제시

다. 한국

국회, 한반도 평화·통일 국민통합 결의안 본회의 통과

- 국회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등을 담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7.2)
 - 결의안에는 남북 간 교류협력으로 신뢰 축적,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민간 경제

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

- 결의안은 북한인권과 관련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에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를 인식하면서 북한에서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표명

한국 의원들, IPCNKR 회의 참석

- 새누리당 황우여, 남경필, 유일호, 홍일표 의원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제10차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회의에 참석(8.1)
 - 회의에서 강제수용소에서의 강제낙태, 고문 등 북한인권의 참상을 알리고 국제 사회의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한 협력을 호소

인권위,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2세의 인권대책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 여성이 중국 체류 중 낳은 아동과 관련한 인권 문제제기(8.19)
 - 인권위는 중국에서 탈북 여성의 2세들이 어머니의 강제복송으로 홀로 남게 되어 친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 강제복송 중단을 위한 외교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낳은 아동과 함께 입국 시 탈북 아동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통일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

국무총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접견

- 정홍원 국무총리는 방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위원들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견(8.19)
 - 정 총리는 “조사위의 활동을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긍정적 기반이 구축되고,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도 끌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 표명
 - 마이클 커비(Michael Donald Kirby) 조사위원장은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조사위가 독립적,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고 응답

국회,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움직임 지속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추진하는 ‘북한인권법 추진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이에 뜻이 있는 여야 의원들의 참여 확대 언급(9.6)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북한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10.1)
 - 황우여 대표는 “국제사회도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 활동과 노력을 기울이는 데 반해 당사국인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으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발언
- 새누리당은 민현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북한은 장성택을 공개 체포한 지 나흘 만에 재판의 기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사형을 선고한 뒤 곧바로 집행했다”면서 “북한인권 상황의 종합적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의 실행을 뒷받침할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언급(12.15)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관련하여, “더 이상 북한의 인권유린에 침묵해서는 안 되고 국회에서 잠자는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통과 시켜야 한다”고 강조(12.16)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 정치권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제정에 뜻을 모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12.18)
-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인권유린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12.18)
- 민주당은 박용진 대변인의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북한인권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생색내기용 법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권개선이 중요”하다고 입장 언급(12.18)
 -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발의)’과 ‘북한민생인권법안(윤후덕 의원 발의)’이 있다고 강조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인권법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제19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만을 확인(12.24)
 - 새누리당 의원들은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를 강조하며 북한인권법이 미치는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법안의 조속한 처리 강조

-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부정적 태도 견지

인권 측면에서 장성택 처형에 대한 비판 제기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장성택 처형과 관련하여 북한의 유엔 인권규약 및 결의안 위반을 비판하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및 즉결처형특별보고관의 조사 및 개입을 촉구(12.13)
-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북한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규약' 위반사항에 대해 지적하며 규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 발송(12.18)
 - 서한에서 장성택 처형 사례는 “북한이 앞으로도 자국민의 생명을 언제라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혹한 상황”이라고 언급
-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장성택 처형 관련 “북한에서 벌어지는 비인도적 살인을 심판하기 위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12.20)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공포통치와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 추진을 위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공동발의 서명을 받은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12.26)

새누리당,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

- 새누리당은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대해 “우리도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표명(12.20)
 -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무지막지한 인명 경시와 인권 탄압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북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발언

2. 유엔과 국제협력

유엔 기구, 북한인권 상황 관련 보고서 발표

-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지원사업 2013년 2분기 보고서(PRRO 200114 Quarterly Report)’는 북한 가정의 80%가량이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식량 부족을 경험했다고 발표(8.7)
 - 식량 부족을 경험한 북한 주민들은 지인에게 식량을 빌리거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음식으로 대체하며 위기를 넘겼다고 설명
 - 응답 주민의 14%는 식사량을 줄였다고 응답했으나, 하루에 한 끼 이상 먹지 못할 정도였다는 주민은 3%에 불과
- 평양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사무소(Resident Coordinator’s Office: RCO)는 북한 홍수 상황 보고서를 통해 홍수 피해를 당한 북한 주민 80만 명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8.23)
 - 수재민 80만 명 중 5살 미만의 어린이가 5만 6천 명이며, 임산부는 1만 4천800명
 - 수해지역에서 설사환자가 30배가량 급증하는 수인성 질병이 확산되고 있으나, 필수 의약품과 의료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
-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장애’ 보고서에서 북한의 장애인 비율이 2007년 기준 전체 인구의 3.4%이며, 동남아시아 11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발표(9.20)
 - 북한 내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 장애 순이라고 발표
-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공동 발표한 ‘2013 세계의 식량 불안정 상황(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13)’ 보고서는 북한 주민 76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라고 강조(10.1)
 - 북한에서 굶주리는 사람의 수는 20년 전에 비해 두 배 증가했으며, 영양실조 주민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31%라고 지적
 -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이 지속될 것이며,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엔의 새천년 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평가
- 세계은행의 ‘2014년 세계발전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2014)’는 국제 사회의 대북지원 증가로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도 호전되었다고 발표(10.9)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2010년 약 6천500만 달러에서 2011년 약 1억 1천800만 달러

로 약 두 배 증가했으며, 유럽연합이 가장 많이 지원했고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와 독일 순으로 지원

- 북한 내 영양섭취가 부족한 주민의 비율은 2011년 33%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일 인당 국민소득 1천 달러 이하 국가 평균 31%보다 높고, 동아시아 평균 11%의 세 배를 기록

-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식량과 영양 안보(Food and Nutrition Security in DPRK)’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식량 사정은 함경북도가 가장 나쁜 반면에, 황해 남북도와 평안북도는 가장 좋다고 지적(10.22)

- 국방과 행정 분야 종사자, 탄광과 채석장 근로자, 건설 노동자, 협동농장 농부들이 가장 많은 양의 식량을 배급받고 있으며, 협동농장 농부들의 경우 개인의 밭에 대한 접근성도 높다고 평가

- 세계보건기구(WHO)의 ‘2013 세계 결핵 보고서’는 결핵으로 사망한 북한 주민이 인구 10만 명당 2011년 10명에서 2012년 9명으로 감소했다고 발표(10.24)

- 북한의 2012년 전체 결핵환자 수는 99만 1천885명이며, 결핵 발병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409명으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나, 결핵집중발생국가에는 불포함

-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은 2012년에만 25명이 확인되었으며, 전체 규모는 3천8백 명으로 추산

-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2013년 하반기 세계식량전망보고서(Food Outlook)’에 따르면, 북한의 2014년 쌀 확보량은 올해 추수한 약 180만 톤과 내년에 수입할 10만 톤 등 약 190만 톤으로 전망(11.11)

- 쌀 이외의 주식인 옥수수는 생산량 230만 톤과 수입량 30만 톤으로 약 270만 톤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2~2013 아시아태평양지역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는 북한이 새천년개발목표 일부 부문의 달성이 어렵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11.21)

- 북한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26% 감소하는 데 그쳤으며, 신생아사망률은 1천 명당 1990년 22.9명에서 2011년 26.3명으로 오히려 증가

- 산모사망률은 10만 명당 1990년 97명에서 2010년 81명으로 약간 감소

- 북한은 저체중 아동의 수, 출산 시 전문인력의 참여, 출산 전 임신부 관리, 자연 보호구역, 기본위생 등 5개 항목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 하루 소득 1.25달러 미만 인구 감소, 양질의 일자리 제공, 양성평등 등의 분야는 자료 부족 이유로 미평가

-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작황과 식량안보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 전체 가구의 75%가 영양부족을 겪었으며, 수확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구가 식량소비의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하다고 평가(11.30)
 - 북한 주민 1명당 섭취한 곡물은 하루 평균 350g으로 국제사회의 영양섭취 권장량에 30% 못 미치며, 협동농장 구성원은 이보다 많은 400g을 섭취했으나 배급제에 의존하는 주민은 310g의 곡물을 섭취
 - 배급이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

유엔 관련 인사, 장성택 처형에 대해 비판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 인권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장성택 처형에 대해 비판(12.16, 12.18)
 - 반기문 사무총장은 장성택 처형이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라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국민 생활을 개선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
-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장성택의 체포와 군사재판 그리고 처형 등 모든 일이 5일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적법한 절차나 국제적 인권 기준을 무시한 처형 집행에 대해 비판
- 유엔의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이나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대한 특별보고관인 크리스토프 헤인즈(Christof Heyns)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 최근의 처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
- 유엔 전문가들의 성명에는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이나 대우에 관한 특별보고관 후안 멘데즈(Juan E. Méndez)도 동참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유엔은 제68차 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공식 상정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12.19)
 -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모든 정치범의 조건 없는 즉각 석방, 강제복송된 탈북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상황 공개를 요구
 - 결의안은 북한에서 고문, 불법 구금, 공개처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성·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의 내용도 포함

-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환영하며, 북한 당국이 조사위의 방북 조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8월 18~27일 방한하여 정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탈북자 단체 등의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서울에서 20~24일 공개 청문회를 개최(8.20)
 - 탈북자들은 북한 내부에서의 인권 침해상황과 정치범수용소 경험,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인신매매, 강제복송 등을 증언
-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관한 정보수집을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도쿄에서 공청회를 개최(8.29~30)
-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영국 런던을 방문하여 공개 청문회를 개최(10.23)
 - 공청회에서는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나와 강제복송과 교화소 수용 생활 등 북한의 인권 실상을 증언
 -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24일 영국 외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 인권유린 책임자들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법률 전문가들과 타진 중이라고 설명
 - 조사위원회는 영국, 서울, 도쿄 공청회를 통해 총 65명의 공개 증언을 청취했으며, 북한 내 인권 유린에 관한 200건의 비공개 문건을 접수했다고 설명
-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미국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공개 청문회를 이틀간 개최(10.30)
 - 공청회에는 탈북 여성이 참석해 북한에서의 어려웠던 삶과 탈북과정에서 겪은 4차례의 강제복송에 대해 증언
 - 공청회에서 앤드류 나치오스(Andrew Natsios) 전 미국 국제개발처장(USAID),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커스 놀란드(Marcus Noland) 등 북한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량 인권 침해상황에 대해 지적

유엔, 북한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방문조사 허용 촉구

-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연세대에서 개최한 북한인권 관련 공청회에서 북한 당국에게

수용소 등 현지방문 조사 허용을 촉구(8.22)

- 커비 위원장은 “강제수용소, 특히 정치범과 관련한 증언들은 분명히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독립적 기구가 해당 장소를 볼 수 있도록 북한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

-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유엔 인권최고대표 홈페이지에 올린 활동보고를 통해 북한 인권 침해상황에 대한 각종 증언들이 증상모략이라고 주장하는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8.26)
-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방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에 현지조사 허용을 재차 촉구(8.27)
 - 조사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부여한 독립성에 따라 조사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북한도 동등하고 공평하게 대한다”는 점을 강조
 -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통역과 이동의 보장 등 지원을 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명
- 커비 위원장은 제24차 유엔 인권위원회 전체 회의 및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북한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9.17)
- 나비 필레이(Navanetham Pillay)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제68차 유엔 총회 보고 연설에서 북한 당국이 조사위원회의 직접 접근을 허용하고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10.26)
- 커비 위원장은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센터(NP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유엔 대표를 통해 ‘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에 공식 요청했다고 언급(11.2)
 - 조사위원회는 북한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3차례 보냈으나, 제네바 북한대표부가 첫 번째 서한에 대해 “조사위 설립은 정치적 이유에 따른 적대행위이므로 참가할 수 없다”는 답변만 보냈을 뿐이라고 설명

조사위원장,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 중간보고

-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구두로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9.17)
 - 중간보고에서 정치범수용소, 국제적 납치, 고문, 연좌제 등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증언들은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다고 언급하며, 보고서 제출 후 국제사회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 그러나 북한의 잠재적 반인도 범죄에 대해 현 단계에서 ICC 회부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
-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8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조사활동에 대한 중간보고(10.29)
 - 커비 위원장은 북한인권 침해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북한과 중국 방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
 - 한국, 일본, 태국, 영국에서 탈북자들의 증언과 그간의 조사활동을 종합할 때, 북한에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

3. NGO 및 기타

〈북한인권 실태보고서 발간〉

핸즈 오프 카인, 북한의 사형집행 건수 발표

- 핸즈 오프 카인(Hand Off Cain)은 북한이 2012년에 집행한 사형 건수는 최소 20건이라고 발표(8.7)
 - 북한의 사형집행 건수는 중국,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에 이어 6번째로 많은 숫자
 - 북한은 체제 유지 및 주민 억압을 위해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 강제복송 탈북자, 경제범죄, 반역죄, 판단이 불명확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
 - 집행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비밀리에 사형을 집행하거나 공식적 건수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설명

북한인권정보센터, '2013 북한인권백서' 발간

-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간한 '2013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내 인권 침해 규모는 4만 6천713건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으며, 인물 규모도 2만 5천977명으로 10.8% 증가(9.26)
 - 인권 침해 발생원인 중 국경관리 범죄가 40.6%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지적

프리덤하우스, 인터넷 사용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 발표

-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인터넷 사용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Freedom on the Net 2013)’를 발표했으나, 북한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10.4)
 - 매들린 어프(Madeline Earp) 동아시아 담당 조사분석관은 북한은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조사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언급
 - 북한은 주민들에게는 ‘인트라넷’을 제공하고, 일부 특권층만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마저도 엄격하게 통제·제한

북한인권정보센터, ‘2013 북한 종교자유백서’ 발표

-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표한 ‘2013 북한 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비밀종교활동에 참가 경험이 있다는 탈북자 비율이 과거에 비해 감소(10.16)
 - 북한 생활 당시 비밀종교활동 참가 경험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2011년 2.2%로 정점을 기록한 후 2년 연속 하향세를 보여 2013년에는 1.3%를 기록

세계식량정책연구소, ‘2013 세계 기아 지수’ 발표

-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2013 세계 기아 지수(Global Hunger Index)’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이 전 세계 120개국 중 27번째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10.16)
 - 북한 전체 인구의 32%가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으며, 5살 미만 어린이의 저체중 비율은 18.8%, 사망률은 3.3%를 기록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 사건 리포트’ 발간

-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 사건 리포트’의 발간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혐의)자들의 신상을 고문, 처형, 정치범수용소 구금 등 유형별로 공개(10.23)
 - 가해자들의 정보는 탈북자 상대 면담조사 자료를 토대로 북한인권정보센터 내 검증위원회에서 여러 확인 작업을 거친 것
 - 신상 공개 목적에 대해 김정은 지도부에 인권 침해 책임자의 신상 정보를 축적하고 있음을 알리고 단죄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ACAPS, '세계 위기 사태 보고서' 발표

- ACAP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는 '세계 위기 사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도주의 위기 '특별감시대상국'으로 분류(11.13)
 - '특별감시대상국'은 식량난, 자연재해 상황, 인권 상황 등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위기의 정도가 높아 우선적 감시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나라로, 북한은 2년 연속 '특별감시대상국'으로 지정
 - 북한의 1천600만 명의 주민들이 만성적으로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240만 명이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평가

국제투명성기구, 2013 부패인식지수 발표

- 국제투명성기구는 세계 177개국을 대상으로 부패인식지수를 조사한 결과, 북한이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라고 지목(12.3)

〈북한 정치범수용소 변화실태 보도〉

-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일부가 폐쇄·해체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8.27)
 - 회령 22호 관리소가 폐쇄되고 2012년 5월까지 수감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일반 시설로 전환했으며, 북창 18호 관리소도 2006년 사실상 해체되고 일부를 제외한 수감자들은 석방되거나 사회에 복귀했다고 소개
-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13년 5월 촬영된 디지털글로브사의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요덕 15호 관리소의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설명(12.5)
 - 함경남도 요덕에 자리한 정치범수용소에서 39개의 주거용 건물이 철거되고 6개의 새 주거용 건물이 들어서 규모가 축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 지원〉

ICNK, 조사위 대상 북한인권 설명회 개최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의 체제 및 인권 문제와 관련 조사위 사무국 스텝들을 대상으로 북한 이해를 위한 설명 진행(7.2)

- 북한인권상황과 체제 등에 대한 설명회를 위해 ICNK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 방문

대한변협, 조사위 면담 및 협력방안 모색

- 대한변협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위원장,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위원을 만나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8.27)
 - 위철환 협회장은 대한변협이 격년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라오스 탈북청소년 복송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라오스 현지에 파견해 적법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조사위에 전달
 - 커비 위원장은 “이번 한국에서의 조사활동을 통해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한변협이 북한인권백서가 조사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피력

국내 북한인권단체, 정부의 조사위 활동 협조 촉구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28개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실태 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10.28)

한변, 조사위 연장 없이 해체 전망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사위원회 고위 실무 관계자를 만난 이후, 조사위원회가 2014년 3월 보고서 제출 이후 해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11.29)
 - 김태훈 대표는 “조사위원회의 실무자들이 ‘올 3월 1년 기한으로 설립된 조사위가 내년 3월 이후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설명
 - 김 대표는 미국, 호주 등이 예산 문제 때문에 활동 연장에 대해 소극적이고 2014년 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 쿠바, 러시아 등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임 되는 것도 부담이라고 분석

〈북한인권 개선 및 탈북자 인권 보호 활동〉

북한정의연대, 라오스 북송 탈북청소년 보호 청원 전개

- 북한정의연대는 라오스에서 북송된 탈북청소년 9명의 안전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7.5)

KCC, 북한 고아 인권 유린 관심 촉구

- ‘북한자유를 위한 한국교회연합(Korean Church Coalition for North Korean Freedom: KCC)’은 북한 고아들의 인권 유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집회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7.17)

독일 단체, 30개 도시에서 북한인권 고발 행사

- 독일의 ‘국제인권사회(International Society for Human Rights: ISHR)’는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뉘른베르크를 비롯해 독일 전역 30개 도시에서 정치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8.2)

제1회 유럽 북한자유주간 행사 개최

- 영국,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4개국에서 제1회 유럽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일주일간 개최(10.7)
 -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는 “북한의 주적이 아닌 유럽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주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
 - 행사는 북한 내 인권 유린이 10대원칙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위해 강조되는 10대원칙이 갖는 반인륜적 문제에 초점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 북한인권주간 행사

-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는 전국 17개 대학 및 마로니에 공원 등지에서 2주간 북한인권 문제를 알리는 북한인권주간 행사를 개최(10.29)
 - 북한인권 강연회, 탈북자와의 만남, 북한인권 사진전 및 영상전, 팟캐스트 공개 방송, 북한음식체험전 등 다양한 행사 진행

탈북난민구호사업단, 탈북자 구출 비용지원 호소

- 탈북난민구호사업단은 어린이 4명을 포함한 탈북자 7명의 안전한 제3국행 지원을 위해 미화 1만 7천 달러가 필요하다고 도움을 호소(11.14)
 - 동 단체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탈북자 약 80명을 구출했으며,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어려워지면서 구출 경비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

캐나다 대학생들, 북한인권 관심 촉구 시가행진

- 캐나다의 델하우지대학(Dalhousie University)의 북한인권을 위한 단체 ‘14호 관리소사업’은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행진을 실시(11.22)
 - 제5차 할히릭스 국제안보포럼(Halifax International Security Forum)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 행사를 개최

북한자유연합, 중국에 탈북자 복송 중단 촉구

-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워싱턴 소재 중국대사관에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12.10)
 - 청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난민지위협약국으로서 탈북자가 복송되어 고문, 강제구금, 처형을 당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

탈북자관심, 북한인권 개선 촉구 시위

- 홍콩 인권단체 ‘탈북자관심(North Korea Defectors Concern)’은 북한인권 개선 및 정치범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12.15)
 - 탈북자 체포를 위한 북한 정권과 중국 공안의 긴밀한 협조를 지적하며 중국 정부에 강제복송 중단을 촉구

군인권센터, 국제사회에 장성택 처형 긴급 청원

- 군인권센터는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관련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등에 즉각적인 방문조사와 제재를 요청하는 긴급청원서 제출(12.16)
 - 이 단체는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과 기타 잔인한·비인간적·굴욕적 대우 및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에 각각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

국내 북한인권단체, 대량 숙청 우려 표명

- 국내 20여 개 북한인권단체는 장성택 숙청 이후 대대적인 처형이 있을 것을 우려해 유엔에 청원서 제출한다는 기자회견(12.19)
 - 북한인권단체들은 ‘김정은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장성택 처형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

- ‘심화조사건’ 등 과거 사례에 비취볼 때 장성택 숙청 이후 대량 숙청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

〈영상 및 도서전 캠페인〉

탈북자관심, 북한인권영화제 개최

- 탈북자관심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 정책과 북한인권 유린 실태를 다룬 홍콩 최초의 영화제 개최(8.10~11)

캐나다 민간단체 ‘자유’, 제2회 토론토 북한인권영화제 개최

- 캐나다 민간단체 ‘자유’는 북한 주민의 인권 및 북한 사회를 알리기 위해 정치범 수용소, 식량난, 주체사상 등 주제를 다룬 10편의 영화 상영(10.25)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강연회 및 인권영화 상영회 개최

-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기 위한 인권 영화제를 개최(10.25)

북한인권시민연합, 인권영화 상영회 개최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서울에서 북한인권 관심 고취 및 탈북자 구출 기금 마련을 위해 인권 영화 상영회 개최(11.10)

탈북자관심, 도서전시회 참가로 북한인권 관심 고취

- 탈북자관심은 홍콩에서 개최되는 도서전시회(Kowloon City Book Fair 2013)에 참가해 북한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과 단체 활동 홍보를 위해 부스를 마련 (12.7~8)

〈인권회의 및 토론회〉

IPCNKR, 제10차 총회 개최

- 북한자유민주인권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은 폴란드 바르샤바 의회에서 제10차 총회를 개최(8.1~2)
 - 제10차 총회는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인권 실태와 북한에 의한 납치·납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논의

통일연구원, 샴시오 인권포럼 개최

- 통일연구원은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이라는 주제로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8.27)
 - 포럼에는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이정훈 한국 인권대사 등이 참석

미국변호사협회, 북한인권 회의 개최

- 미국변호사협회(ABA)는 영국 런던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 유린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법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10.16)

북한인권위원회, 대규모 북한인권 회의 개최

- 북한인권위원회(HRNC)는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등 인권 유린을 고발하는 대규모 인권회의(The Heart of Darkness: North Korea's Hidden Gulag) 개최(11.7)
 -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달 말 가진 유엔 총회 중간보고에서 중국과 라오스 대표 측이 탈북자 강제복송 정책을 변명하는 등 국제적 압박에 대한 반응을 나타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

한스자이델재단 등, 북한인권 국제 학술회의 개최

- 한스자이델재단, NK지식인연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등은

2012~2013년간 진행된 ‘한국-유럽연합의 인권과 민주화 이행을 위한 대화 프로그램(EU-Korea Human Rights and Democratic Transition Dialogue Programme)’을 마감하는 국제 학술회의 개최(11.18)

북한인권정보센터 등, ‘북한인권 사건기록과 인권운동’ 세미나

- 북한인권정보센터와 한스자이텔재단은 ‘북한인권 사건기록과 인권운동’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11.19)

통일연구원, 북한인권 유럽회의 개최

- 통일연구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근 북한 현황과 북한인권 기술협력’을 주제로 제2회 유럽 북한인권포럼 개최(11.19)

민주평통, 한영 협력포럼 개최

- 대통령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영국 런던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의 인권’을 주제로 2013 한·영평화통일포럼을 개최(11.19)
 - 포럼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현과 한·영협력방안, 북한의 인권 실상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정훈 한국 인권대사, 리처드 모리스(Richard Morris) 영국 외무부 태평양담당 국장, 피터 보텀리(Peter Bottomley) 보수당 하원의원 등이 참여

한변, 북한인권 토론회 개최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북한인권 문제 공감대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12.9)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 개최(12.9)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12.9)

북한인권정보센터, 탈북자 인권 침해 세미나 개최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인권 침해실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재중 탈북자 관련 보고서를 발표(12.10)
 - NKDB는 중국 내 체류 중인 탈북자, 국내 탈북자 및 NKDB 통합 인권DB의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재중 탈북자에 대한 인권 침해상황을 보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열린북한방송은 ‘북한 COI활동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2013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개최(12.12)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 고발〉

몽골 정부, 북한 노동자 수 공개

- 몽골 정부는 정식 취업허가를 받고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수가 2013년 4월을 기준으로 1천749명으로, 몽골 내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15%를 차지한다고 설명(7.2)
 - 북한 노동자에게 1인당 매월 600~700달러의 임금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작업 도구, 장비가 부족해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가 맨손 작업하는 경우 다반사

폴란드 언론, 폴란드의 북한 노동자 수입 증가 보도

- 폴란드 주간지 ‘뉴스위크 폴스카’는 폴란드 정부로부터 노동허가를 발급받은 북한 노동자들이 2011년 239명에서 2012년 50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8.29)
 -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이 북한 노동자 착취를 우려해 인권보호 차원에서 북한 노동자 수입을 금지한 이래로 EU에서는 폴란드가 유일하게 북한 노동자를 수입하는 상황

러시아 북한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

-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자 속출(연합뉴스, 9.20)
 - 북한 근로자들은 대개 냉난방도 없는 열악한 구조련식 낡은 아파트나 지하대피소에서 8~10명이 함께 숙식
 - 하루 10~11시간씩 중노동을 하다가 다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며,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외면당하거나 부의금마저도 간부들에게 착복당하는 일이 발생
- 자유아시아방송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건설 근로자들의 노동착취 상황을 보도(9.23)
 - 러시아 파견 북한 근로자들은 국가계획 외에도 청부업을 통해 번 돈까지 간부들에게 상납하는 이중고를 겪는 형편
 - 북한 근로자들은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모스크바까지 청부업을 위해 이동하지만, 도주를 우려한 북한 당국에 의해 여권을 회수당해 합법적 신분이 없어 청부업을 해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러시아 북한 노동자 증가 및 다변화

- 2013년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의 수가 2012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했으며, 단순 노무직 위주에서 숙련 기술자까지 다변화 추세(11.14, 11.25)
 - 2013년 9월 말까지 러시아 이민국이 북한 국적 노동자들에게 발급한 노동허가서는 2만 1,700건으로, 이 중 728건은 숙련 노동자, 34건은 고숙련 노동자에게 발급
 -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 따르면 북한 파견 숙련 노동자의 비율은 2012년에 비해 2.8배 증가

러시아 북한·외국인 노동자 쿼터 축소

- 러시아 언론은 극동 아무르주가 북한 측에 2014년도 북한 노동자 도입 규모를 2013년보다 26% 이상 줄이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12.11)
 - 일간 아무르스카야 프라브다에 따르면, 2013년 11월 아무르주에서 개최된 북·러 노동자 교환협정 이행 점검을 위한 실무그룹 제4차 회의에서 아무르주는 북한 노동자용 비자의 할당량을 올해 2,990개에서 내년 2,205개로 감축하겠다고 통보

- 러시아 극동 지역 및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잇따라 외국인 노동자 쿼터 감축을 발표 (12.20)
 - 연해주 정부는 지역 건설업계의 외국인 노동자 수요 감소에 기인하여 2014년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2013년보다 13% 적은 2만 3,616명으로 결정
 -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주도 2013년보다 14.3% 감소한 2만 2,200명을 2014년도 외국인 노동자 쿼터로 결정
 - 이러한 결정이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파견에 영향을 받을지 주목

〈기타〉

북한인권시민연합, 외교부 장관 상대 제소

-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7.12)
 - 제소 경위는 2013년 5월 탈북청소년들이 라오스에서 추방되어 복송된 사건과 관련하여, 탈북자 대응 매뉴얼과 당시 외교부의 대응 정보 공개

북한 내 대규모 만성 다제내성결핵 환자군 존재

- 미국 ‘브리검 앤 워민스(Brigham and Women’s Hospital)’ 병원의 승권준 박사와 ‘유진벨재단’의 스테판 린튼(Stephen Linton) 회장은 공동발표 논문을 통해 북한 내부에 만성 다제내성결핵 환자가 상당히 존재한다고 발표(8.1)
 - 가장 긴급한 문제로 가격이 비싼 다제내성결핵 치료 약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 국제사회가 북한의 다제내성결핵이 제기하는 위협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

조선 익스체인지, 북한에서 ‘해외부패방지법’ 연수

- 싱가포르 비정부기구인 ‘조선 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는 평양에서 국제 거래 시 외국 관료에게 뇌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주제로 연수 진행(8.26)

북한 군사 전문가, 정치범수용소 내 화학무기 생체실험 추정

-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Jeseph S. Bermudez Jr.)는 북한전문

웹 사이트 '38노스'에 정치범수용소에서 낮은 수준의 화학무기 작용제 실험 가능성에 대해 기고(10.12)

남아공 외교부 장관, 북한에 정치범수용소 확인 요청

- 이브라힘 이브라힘 남아프리카공화국 외교부 장관은 방북 중 북한 당국에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북한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인터뷰 중 언급(11.27)

4. 분석 및 평가

미국 및 국제기구 각종 보고서, 북한 인구 및 식량 관련 통계 발표

- 미국 및 국제기구는 북한인권 환경을 판단할 수 있는 인구 및 식량 지표를 발표
 - 미국 인구참조국은 평균수명 상승과 유아 사망률 감소를 발표, 세계은행은 국제 사회의 대북지원 증가로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발표, 세계보건 기구는 북한 결핵 사망률 감소 발표
 - 그러나 미 농무부는 북한 전체 인구 70% 이상이 식량부족 상황이라고 평가,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생산계획 역시 북한 전체 가구 75% 영양 부족 평가
-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지원으로 인한 북한 주민 영양상태의 일정한 호전이 보고 되는 한편, 북한체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인하는 식량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동시에 공존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 국제적 환기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 인권 문제 전문가들은 장성택 처형을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을 무시한 처형 집행을 비판
 - 장성택 처형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68차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합의로 채택, 북한에서의 고문, 불법 구금, 공개처형 등 인권 침해에 대한 개선을 촉구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보다 확산·심화될 것으로 전망

- 장성택 처형은 북한의 비인도적 처사와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적으로 환기시키며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인크위)의 활동에도 탄력을 가져와 2014년 초에 나올 결과보고서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장성택 처형으로 국회 북한인권 관련 법 제정 필요성 제기

- 북한의 장성택 처형은 북한인권 관련 법 제정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새누리당은 북한이 장성택을 체포한 지 나흘 만에 특별군사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집행한 것을 두고 북한인권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
 - 민주당은 장성택 처형 등과 관련한 여당의 북한인권법 공세에 실질적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과 '북한민생인권법안'이 있다고 강조
- 2013년 12월 제19대 국회 처음으로 열린 북한인권법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 이견만 확인했으나, 장성택 처형으로 국회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는 분위기는 확산될 것으로 전망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 본격 개시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한국, 일본, 태국, 영국, 미국 등을 방문하여 해당국 관계자와의 면담과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 본격화
 - 조사위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중간보고를 통해 여러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광범위한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해 확인했음을 강조
 - ICNK 등 국내외 북한인권단체들은 조사위의 활동에 적극적 협조
- 북한 현지 방문 조사 활동의 제약에 따라 결과보고서 전까지 실태 파악의 어려움 지속 전망
 - 탈북자 증언을 통한 피해 사실 확인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외에 현지 방문조사, 북한 당국의 자료 제공 및 설명 등이 확보되지 않아 입체적인 실태 파악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
- 조사위가 수차례 현지 방문 조사 활동을 촉구하였으나 북한 당국은 조사위 설립 자체를 “정치적 이유에 따른 적대행위”로 간주하여 불응함으로써, 이후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

국내외 NGO의 북한인권 실태를 파악하는 자료의 다양화

- 국내외 NGO들은 북한인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 항목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발표를 지속
 -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의 발간
 - 북한인권 관련 사건 사례들의 수집·축적과 유형별 분류
 - 사형집행건수, 인터넷 사용 실태, 종교활동 실태, 기아 지수, 재해 실태, 부패지수, 수용소 실태 등 주제별 실태 자료 발표
- 국내외 NGO들이 북한인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 항목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국제적인 실태 파악 노력에서도 NGO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



1. 미국에 대한 반응	31
2. 일본에 대한 반응	32
3.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반응	34
4. 남한에 대한 반응	36
5. 분석 및 평가	39

1. 미국에 대한 반응

〈케네스 배의 정치적 활용〉

케네스 배 수감 생활 보도

- 케네스 배(Kenneth Bae, 한국명: 배준호)의 인터뷰와 함께 수감 생활을 자세히 보도(7.3, 조선신보)
 - * 케네스 배는 2012년 11월 3일 북한 라선시에 입국하다가 체포
 - 2013년 4월 27일 예심을 마치고 4월 30일 최고재판소에서 재판
 - 최고재판소는 배 씨에게 북한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하여 15년 노동교화형 선고
 - 배 씨는 5월 14일부터 형 집행에 들어갔는데 일반교화소가 아닌 특별교화소에 입소하여 교화생활 시작(5.15, 조선중앙통신)

미국 북한인권특사 초청 철회

- 북한 외무성은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의 방북 초청을 철회(8.31)
 - 북한 외무성은 그 이유를 미국이 “B-52H 전략폭기를 들이밀어 핵폭격훈련을 벌리는 엄중한 군사적 위협행위를 감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8.31, 조선중앙통신)

〈미국 내의 인권 문제 비판〉

불법 도청(盜聽)을 계기로 미국의 인권 태도 비난

- 북한 매체들은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의 도청을 계기로 미국의 인권 상황을 강도 높게 비난
 - “말끝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염불처럼 외우던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과 개별적 사람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했다”며 비난(7.2, 평양방송)
 - 스노든이 폭로한 사실을 토대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기 위한 모략과 정탐활동을 감행하는 제국주의 나라”라고 비난(7.6, 조선중앙방송·노동신문)
 - “통신의 비밀을 도청하는 것은 초보적 인권개념도 없는 인권유린행위의 극치”라고 비난(11.5, 조선중앙통신)
 - 11월 26일 미국의 불법도청행위에 대처하여 브라질과 독일이 발기한 ‘정보화 시대의 사생활 권리’ 결의안에 대하여 북한 대표가 지지연설(11.29, 조선중앙방송)

미국의 인권 침해 행위 비난

- 미국에서 발생한 기형아 친딸 매매광고, 10년간 여성 감금·유린 등에 대하여 미국은 “약육강식, 황금만능의 썩어빠진 부르조아 사상이 지배하는 인권불모지”라고 비난(8.21, 평양방송)

2. 일본에 대한 반응

〈군국주의 부활 및 우경화 움직임 비판〉

평화헌법 개정 및 집단적 자위권 움직임 비판

-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침략전쟁의 전주곡’이라고 비난(8.11,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 헌법해석 재검토 보고서 작성 지시 등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을 ‘반평화적 행위’라며 중단 촉구(8.27,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조선중앙방송)

독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비판

- 일본 정부의 ‘독도문제’ 특별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사회여론 오도 및 일본 국민들에 대한 독도강탈 선동행위라며 비판(8.12, 조선중앙통신)
 - * 일본 내각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자국민을 상대로 6월 20일부터 11일간 특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8.1)
 - 조사 결과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응답한 사람은 60.7%

〈과거사 문제 비판〉

위안부 문제 비판 및 책임 촉구

- 북한 매체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
 - 일본 정치인들과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하시모토)가 위안부 제도가 정당했다는 발언에 대하여 “일본은 특대형 반인륜범죄에 대한 사죄·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7.15, 조선중앙통신)

- 미국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주미 일본 총영사관과 일본 외무성의 유감 표시를 ‘후안무치한 언동’이라고 비난하며 위안부 범죄의 인정 및 청산을 촉구(8.13,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8.14, 평양방송)
- 북한의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광복 68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의 ‘일본군 성노예 등 일제강점시기 반인륜적 범죄 책임회피 및 군국주의 우경화’를 비난하고 과거청산을 촉구하는 담화 발표(8.14, 조선중앙통신·평양방송)
- 도쿄 국립공문서관의 위안부 강제연행 문서 공개(10.7)와 관련 “전범국의 사죄와 배상은 국제법상으로는 인륜 도덕적 견지에서나 회피할 수 없는 국가적 책임이고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10.21,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일본군 성노예범죄가 정당했다는 발언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범죄가 실제적으로 존재했으며 그 엄중성 또한 크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반성과 배상 촉구(11.25,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조선중앙방송)
- 일본 당국자가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와의 회담에서 여성들에 대한 폭행 근절과 여성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한 발언에 대해 “일본이 여성권리에 대해 말하려면 일본군 성노예범죄부터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12.3, 조선중앙통신)
- 프랑스에서 진행된 ‘일본군 성노예범죄 규탄’에 대한 집회 소식을 상세히 전하며 일본의 과거범죄 부정은 “성노예범죄 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에 정면도전”이라고 일본의 과거청산을 촉구(10.2, 조선중앙통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판

- 북한 매체들은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며 과거청산 촉구
 - 우익보수정객 및 아베 내각 3명의 야스쿠니 신사참배(8.15)에 대해 “우리(북한) 인민과 아시아 인민들의 아픈 상처에 또다시 칼질하는 범죄행위”이라며 비난(8.15, 조선중앙통신/ 8.17, 평양방송/ 8.19,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8.27,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 일본 국회의원 150여 명의 야스쿠니 신사참배(10.18)에 대해 “군사대국화와 재침준비를 다그치려는 군국주의 망동으로 과거 일제의 전쟁범죄와 똑같이 엄중시해야 할 특대형 범죄행위”라고 비난(10.22, 조선중앙통신)
 - 아베 수상의 재물 봉납 및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관련하여 “과거청산 없는 일본의 미래는 없다”며 과거청산 촉구(10.29, 중통·민주조선/ 10.30,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조선중앙방송)

간토 대학살에 대한 과거청산 촉구

- 북한은 ‘조선인 강제연행피해자 유가족협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간토 대학살 만행 9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 당국은 오늘까지도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고사하고 진상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과거청산 촉구(8.31,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

역사교과서 왜곡 비판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움직임에 대해 “과거 범죄행위에 대해 부정하며 역사교과서를 뜯어고치려 하는 것은 재침을 위한 국가적 체계,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라고 비난하며 사죄와 배상 촉구(12.5,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조선중앙방송)

〈일본인 납북자 문제 회피〉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를 회피하며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연계

- 일본 아베 총리는 유엔 총회 제68차 회의에서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북일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발언
 - 이에 대해 북한은 “납치범죄, 성노예 범죄의 본산인 일본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고 과거에 대한 청산을 회피하려는 간악한 술책”이라고 대응(10.4, 조선중앙통신)

3.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반응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 비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 비난

-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공개청문회 개최, 남한의 협조 등을 북한에 대한 모략행위라며 비난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공개청문회에 대해 “정세 흐름과 맞지 않게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을 걸고들며 반공화국 모략 소동에 매달린다면 모처럼 마련된 대화 분위기가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려질 수 있다”고 비난(8.23, 우리민족끼리)

- 조사위원회의 방한 활동 및 국무총리의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발언에 대해 “반북 인권모략 소동, 체제통일 선언”이라고 비난하며 대결책동을 중지하라고 주장(8.24,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북한인권 문제를 다시 들고나와 소동을 벌이는 것은 대화 분위기가 비위에 거슬리거나 그것을 깨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8.27, 조선중앙통신)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불만을 표출하며 북한인권결의 채택 비난

-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제68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서방식 가치관이라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불만 토로(10.1)
-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대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해마다 벌리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작놀음은 인권의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라며 대북인권결의 채택을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11.20, 조선중앙통신)

〈인권 관련 법제 정비 및 조치 실시〉

장애인권리협약 서명 및 장애인보호법 개정

-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7.3)하고 후속조치로 장애인보호법을 개정(11.21)
 -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고려하여 장애인보호법을 일부 개정
 - 장애인보호법에 장애인후원기금 설립 조항을 신설(12.6, 조선신보)

인민생활 향상 및 경제발전을 위한 조치 실시

- 북한은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권리, 식량권 등과 관련하여 인민생활 향상 및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실시
 -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하고,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민간 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 설립(10.16, 조선중앙통신)
 - 경제개발구법 채택(5.29)의 후속 조치로 신의주특수경제지대와 13개 경제개발구를 설치(11.21)
 - 장성택 처형 이후에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강조(12.20, 조선신보)
 -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채택(2011.12.3) 사실을 2년 만에 공개(12.25, 조선중앙통신)

-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농업생산 증대를 통한 식량문제 해결 등 2014년도 농업 부문 과업을 논의하여 결정(12.28, 조선중앙통신)

4. 남한에 대한 반응

〈남한 내의 인권 문제 비판〉

‘범민련’ 남측 사무실 수색 및 의장대행 구속 비난

- 북한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범민련 남측 본부 사무실 수색을 ‘반민족·반통일적 범죄’라고 비난하며 반대투쟁 선동(7.1, 조선중앙통신·평양방송)
- 범민련 북측본부는 대변인 담화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대행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은 ‘반인륜·반통일적 범죄행위’라며 ‘보안법 철폐, 통일운동단체 인사들 석방투쟁 전개’를 선동(7.25, 평양방송·조선중앙통신)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수사 비난

- 북한은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것은 남한 사회의 민주화와 남북대화,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기 위한 파쇼대결광신자들의 일대 광란극”이라고 주장(9.6, 조선중앙통신·평양방송)

교학사 교과서 검정 통과 비난

- 북한은 남한의 출판사 교학사에서 간행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사편찬위원회 검정 통과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도전행위이고 노골적인 역사 반란행위”라고 비난(9.8, 평양방송)
- 북한 교육위원회 대변인은 남한 교육부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관련 “새 세대들에게 반공화국 적대의를 주입시키고 파쇼독재 역사를 합리화하려는 망동으로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며 교육 사업에 대한 모독이고 유린”이라고 비난(12.6,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

임진강 월북 기도자 사살 비난

- 조평통은 임진강을 통해 월북을 기도(9.16)한 40대 남성에게 대한 우리 군의 사살을 ‘반인륜적 만행’이라고 비난(9.26, 평양방송·조선중앙통신)

남한 군대 내의 인권 문제 보도

- 북한은 육군 여성장교의 성폭행 자살사건을 보도한 MBC방송을 인용해 남한 “군 내에서 구타와 폭력행위, 성폭행으로 인한 자살이 계속 늘고 있다”고 주장(10.27, 조선중앙통신)

철도노조 파업 대응 비난

- 북한은 남한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한 것에 대해 “유신독재자의 악행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비판(12.22,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북한은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철도노조 불법 파업에 대한 강력대응을 ‘파쇼적 탄압’이라고 비난(12.28,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

민노총 본부 공권력 투입 비난

- KBS방송을 인용해 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철도노조 핵심성원들에 대한 체포 시도를 보도(12.23, 조선중앙방송)
-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역대 군부깡패들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민중대학살 사건들을 그대로 재현한 파쇼적 폭거”라고 비난하며 남한 노동자들의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지지(12.27, 조선중앙방송·조선중앙통신)

〈북한인권 실태 고발 및 관련 활동 비판〉

북한인권백서 발간 비난

- 북한 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13 북한인권 백서’ 발간을 “우리(북한)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며 북남대결을 격화

시키려는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10.3, 조선중앙통신)

-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13' 발간과 관련하여 "신성한 존엄과 사회주의 영상을 훼손하며 남북대결을 더한층 격화시키기 위한 비열한 술책"이라고 비난(12.29,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북한인권국제영화제' 비난

- 북한은 제3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의 진행을 "인권의 간판 밑에 우리(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10.24, 평양방송)

남한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제안국 참여 비난

- 조평통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남한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이라며 반발하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11.24,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

〈탈북자 지원 비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탈북비용 지원 행위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을 통해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탈북자 도강비용 지원'과 관련해 통일부에 대해 '인신매매부'라고 비난(11.5)
 - 북한은 "남조선 괴뢰패당이 돈을 뿌려가며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돈을 뿌려가며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북한) 주민들을 유인납치하고 악랄한 반공화국인권 모략소동에 광분했다는 것이 다시금 입증됐다"고 주장

〈인도주의 사안에 대한 비난 및 책임 전가〉

정부의 6·25전쟁 납북자 인정 비난

-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의 '6·25전쟁 납북자' 인정을 '용납 못할 반공화국 대결망동'이라고 비난(7.2, 조선중앙통신)

- * 2010년 12월 13일 출범한 남한의 ‘6·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2013년 12월까지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총 2,560명을 6·25전쟁 남북자로 결정

이산가족 상봉 무산 책임을 남한 정부에 전가

- 남북은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 규모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 발표(9.21)
 - 조평통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에 대해 “괴뢰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 책동의 산물로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보수패당에 있다”고 책임 전가(9.22,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
 -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북한의 일방적 연기로 무산되었다는 통일부 대변인의 성명에 대해서 “반북 대결과 중상모략, 책임회피”라고 비난(9.23, 평양방송)
 -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제68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산가족 상봉 무산 등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북한)의 성의 있는 노력으로 모처럼 개선 되어가던 북남관계가 남조선 당국의 구태의연한 동족대결 행위로 하여 또다시 파국 상태에 빠질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고 책임 전가(10.1)

5. 분석 및 평가

북한인권 개선 활동 및 탈북행위 지원 반발

- 북한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 및 탈북행위 지원을 체제에 대한 도전 행위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는 양태를 지속
 -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 유엔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남한 내의 북한인권백서 발간, 북한인권영화제 개최에 민감하게 반응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탈북비용 지원 행위에 대해서 통일부를 신랄하게 비판
-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은 2014년 상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며, 특히 장성택 처형 이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반발 강도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 2014년 3월 예정되어 있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에 김정은에 대한 ICC 제소 권고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북한의 강력한 반발 예상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몰타기

- 북한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 일본, 남한에 대해 이들 국가 내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몰타기를 지속
 - 미국에 대해서는 불법 도청 사건을 계기로 미국을 비난
 - 일본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간토 대학살, 역사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문제 제기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및 우경화 움직임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과거사 비판 강도를 강화
 - 남한 내의 인권 문제 비판도 지속되고 있는데 2013년 하반기에는 범민련 남측 사무실 수색,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한국사 교과서 검정 문제, 군대 내의 인권 문제, 철도노조 파업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

인권법제 정비 및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조치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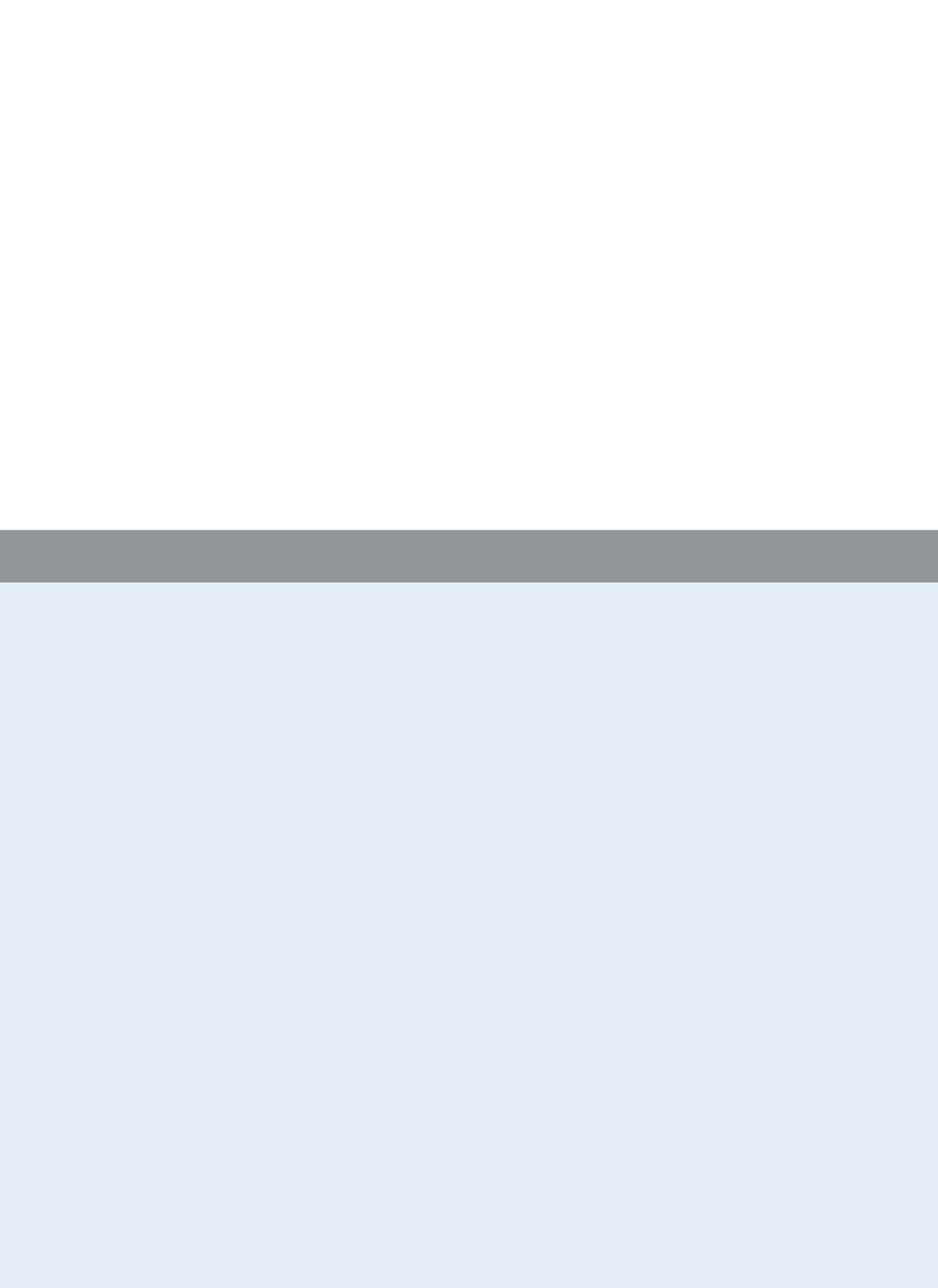
-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인권법제 정비 및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조치를 지속
 -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장애인보호법을 일부 개정
 - 북한의 장애인 법제 정비는 대외적으로 인권 개선에 대한 선전효과를 도모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외투자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신의주 특수경제지대와 13개 경제개발구 설치,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설립,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채택 사실 공개 등의 경제적인 조치 실시
- 인권법제 정비 및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조치는 2014년 상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사회통제 및 사상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는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전망

케네스 배 억류 사건 및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정치화

-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초청하고, 남한과는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하여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진전을 이룰 기회가 있었으나 킹 특사의 방북을 철회하고 이산가족 상봉 합의는 일방적으로 연기
- 킹 특사의 방북 철회는 케네스 배의 억류사건과 연계하여 북·미 대화에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산가족 상봉 연기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와 이를 통한 남남갈등 조장을 의도하고 있다는 평가

납북자 문제 불인정

- 북한은 납북자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본과 남한 정부를 비난
 - 일본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로 맞대응
 - 남한 정부의 6·25전쟁 납북자 인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 일관



인도주의 사안



1. 탈북자	45
2. 납북자	60
3. 국군포로	64
4. 이산가족	65
5. 분석 및 평가	68

1. 탈북자

북한 보위부, 탈북자 유인·납치 시도

- 자유아시아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남한과 해외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가족들을 볼모로 삼고 전화통화를 시도한다”고 보도(7.3)
 - 함경북도 무산군 출신의 한 탈북자는 “북한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북한 보위부원과 직접 통화한 사례가 있으며, 북한의 가족은 예전과 달리 김정은 찬양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북한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회유까지 했다”고 설명

국립중앙의료원, 탈북자 의료실태 논의 토론회 개최

-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탈북자들의 의료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7.5)
 - 탈북자의 정신건강은 남한 생활의 성공적 정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제시될 정도로 중요하나,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북한 생활과 탈북과정에서 얻은 상처 등으로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현실
 - 탈북자들의 경우 정신과 진료에도 거부감이 커 치료를 권고한다 하더라도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황

탈북 경로 무사

- 데일리NK는 지난 5월 라오스에서 탈북청소년 9명의 강제북송으로 인해 폐쇄 우려되었던 ‘중국-라오스-태국’ 탈북 루트가 무사하다고 보도(7.11)
 - 라오스를 통해 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라오스 정부의 협조하에 탈북자들의 입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 탈북자 수의 감소로 인해 과거에 비하여 태국에서 국내 입국까지의 기간이 한 달 정도로 단축

통일부 및 여가부, 탈북 여성 지원 강화

-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는 탈북자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 증진과 가족생활에 대한 교육 지원, 탈북 여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7.12)

- 하나원에서 진행되는 탈북자 사회적응교육과정에 양성평등 및 가족생활 교육 내용을 강화하고, 성폭력 등 문제에 대한 상담직원 교육도 지원 예정
- 여가부는 탈북 여성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아이 돌보미 일자리, 직업훈련교육 대상자 등에 탈북 여성을 우선 선발할 방침

중국, 새 출입국관리법 시행

- 중국이 7월부터 외국인 불법입국·체류·취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새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하면서 탈북자 단속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7.12)
 - 새 출입국관리법 시행으로 인해 대외국인 조치 대응권한이 시(市)급에서 현(縣)급 지방정부 공안기관으로 낮아지면서 탈북자를 비롯한 불법입국·체류·취업 외국인에 대한 단속 강화 움직임
 - 소도시나 농촌에 숨어 지내던 탈북자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
 - 새 법은 불법입국·체류·취업 외국인에게 2천~1만 위안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 후 강제출국시킨 뒤 1~5년간 재입국 규제

탈북자 유인·강제복송 관여자 처벌

- 북한 보위부 공작원 출신 탈북자 채 모 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들에 접근·유인한 후 보위부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 후 징역형 선고
 -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채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7.15)
 - 채 씨가 북한에 넘긴 탈북가족 3명과 군인 2명은 북한으로 강제압송된 후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것으로 추정
 -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채 씨는 밀무역 사실 적발로 처벌을 피하고자 2003년 입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 이후 2004년 9월부터 탈북브로커 활동과 밀무역을 위해 중국 왕래 도중 북한에 남은 가족 보호에 도움을 받고자 보위부 간부와 전화 통화 중 재포섭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채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으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성이 크며 목숨을 걸고 탈북한 동포가 복송 시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계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8.23)
 - 서울고법 형사1부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채 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 선고(12.22)

러시아, 북한 노동자 탈북 지원 한인 목사 추방

- 러시아의 비밀경찰(KGB)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노역하던 북한 노동자들의 한국·미국행을 지원한 한국인 목사에게 간첩혐의를 씌워 추방(7.17)
 - 이우복牧사는 2010년 교회를 찾아와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어 강제송환 되지 않고 자유세계로 가고 싶다며 도움을 구한 북한 별목공 7명에게 구원 단체를 소개

통일부, 2분기 국내 입국 탈북자 증가세

-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7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0명에 비해 소폭 상승(7.21)
 - 올해 1분기에는 32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0%가량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2분기 들어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증가 추세
 - 일각에서는 지난 5월 라오스에서 강제추방당한 탈북청소년들 사례로 불안감을 느낀 제3국 체류 탈북자들이 입국을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제기

재단, 탈북 여성 산모·신생아 도우미 양성교육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 여성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양성교육’을 진행(7.24)
 - 교육 대상자로는 출산·양육 경험이 있는 만 60세 미만의 탈북 여성 40명이며, 탈북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산모들의 출산·육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 재단 관계자는 “북한 출신의 도우미들이 파견된다면 산모들의 민감한 문제도 더욱 편안하게 보듬어줄 것”이라고 설명
 - 재단은 교육 수료 여성들에게 향후 재단을 비롯한 기관들의 산모도우미 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

40대 탈북자, 의붓딸 성폭행 처벌

-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탈북 여성의 1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10년 선고(7.24)
 - 재판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미성년자를 아버지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 설명

일가족 등 탈북자 25명, 태국에서 체포

- 태국 언론들은 태국 각지에서 총 25명의 탈북자가 체포됐다고 보도(7.25)
 - 태국 일간지 타이래스(Thairath)는 7월 22일 태국 북부 치앙센에서 불법 입국 탈북자 12명이 체포되었다고 보도
 - 메사이 뉴스 인터넷판(Maesai News Online)은 메콩 강에서 지난 5월 31일 남성 한 명, 여성 8명, 각각 두 명의 남녀 어린이로 구성된 탈북자 13명이 체포되었으며, 당국의 기초신문 결과 이들이 가족관계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태국 당국은 과거 5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불법 입국 탈북자들을 체포

태국 치앙마이 경찰, 태국 북부 매달 50여 명 탈북자 유입

- 태국 치앙마이 지역 경찰은 태국 북부로 불법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몇 년째 매달 평균 50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언급(7.26)
 - 태국 정부는 불법 입국 탈북자 수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형편
 - 불법 입국자들에게 태국은 미화 700만 달러 미만의 벌금 혹은 구금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구금형의 경우 하루에 7달러의 벌금을 공제
 - 그러나 일부 탈북자들은 경찰을 통하지 않고 중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의 도움으로 태국 북부를 거치지 않은 채 방콕으로 직접 이동해 전체 입국 탈북자 수의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

보험사기 탈북자, 가짜 진단서 이용 사실 적발

-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국내 병원에서의 치료병력이 없는 점을 이용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가짜 진단서를 이용해 허위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이 모 씨 등 탈북자 3명을 약식기소(7.29)
 - 이 씨는 2010년 탈북자 보험설계사 김 모 씨로부터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바탕으로 7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다른 탈북자 최 모 씨를 대신 진단받게 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

하나원장, 탈북자 정신병원 강제입원 동의 권한 없다는 판결

- 서울북부지법 민사11단독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하나원의 조치가 위법이라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박 모 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8.1)

- 2009년 2월 하나원장은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로서 하나원 입소 후 불안정 증세를 보이고 하나원 소속 심리상담사와 정신과 의사로부터 입원치료필요 판정을 받은 박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동의서 제출
- 박 씨는 약 3개월간 정신병원에서 치료
- 재판부는 “박 씨의 보호의무자는 하나원장이 아니라 안산시장”이었기 때문에 “박 씨의 강제입원을 동의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는 하나원장 등의 직무집행은 위법이었다”며 박 씨에게 1,08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여간첩, 징역 5년 확정

-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하다가 탈북자로 위장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여간첩 이 모 씨에 대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형이 확정(8.2, 11.25)
 - 1·2심은 이 씨의 공작활동 등은 유죄로, 위장 귀순 혐의는 “2007년 이후 공작원으로서의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
 - 이 씨는 수사기관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항소심 및 상고심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심에서는 원심 확정

캐나다 NGO, 탈북지도자 프로그램 운영

- 대북인권단체 한보이스(HanVoice)는 탈북청년 대상 6개월간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HanVoice Pioneers Project)을 시범 시행(8.6)
 - 토론토에 기반을 둔 한보이스는 선정된 탈북자에게 3개월간 영어, 정치, 사회, 공공연설 등 북한인권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이후 3개월간 캐나다 오타와의 배리 드볼린(Barry Devoline) 하원의원실 연수 기회를 제공

북한, 탈북자 색출·북송 임무 정찰총국 이관 및 강화

- 데일리NK는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가 담당하던 해외 체류 탈북자 색출 및 북송 임무를 정찰총국으로 이관하고, 젊은 전투요원을 파견함으로써 탈북자 체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8.8)
 -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파견하는 정찰총국 전투원들은 서너 명이 한 조를 꾸려 탈북자들이 출현하는 곳에서 한국행을 빌미로 브로커에게 접근해 다른 탈북자들과 합류, 이들이 제3국으로 입국하기 직전에 제압해 북송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설명

중국 방문 탈북자, 행불 사례 증가

- 데일리NK는 올해 들어 가족의 탈북을 돕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불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8.9)
 - 사례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납치 공작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경찰관계자는 “사전 방지를 위해서는 탈북자들이 경찰관을 믿고 담당형사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LiNK, 탈북자 구출

-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링크(LiNK)는 2013년 한 해 동안 77명의 탈북자를 구출하면서 본격적인 탈북자 구출활동을 시작한 2010년 이래로 총 204명의 탈북자를 구출(8.20, 10.22, 12.23)
 - 2013년 1월부터 한 해 동안 ‘북한과의 가교(Bridge to North Korea)’ 이름의 탈북자 구출 기금 마련 운동
 - 8월까지 42명의 탈북자를 구출해, 총 171명의 탈북자를 지원
 - 9, 10월 두 달간 17명을 포함해 2013년에는 총 59명의 탈북자를 구출했으며, 링크가 구출한 탈북자 중 약 10퍼센트만이 미국행을 택하고 나머지는 한국행을 선택했고 먼저 온 가족과 재회한 비율이 40퍼센트를 초과했다고 설명
 - 12월까지 전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탈북자 77명의 구출에 성공

간첩혐의 서울시 공무원, 무죄 판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2일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국내 거주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교 출신 공무원 유 모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8.22)
 - 국가보안법 위반에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 받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데 대해서만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선고(25,653,170원)
 -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국적이 밝혀질 경우 힘겹게 이룬 생활터전을 잃고 강제추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북한 주민, 을지훈련 중 서해 탈북

- 군 당국에 따르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 중 북한 주민이 23일 새벽 서해 교동도 해안을 통해 넘어와 주민에게 발견(8.23)

외교부, ‘한민족공동체팀’ 신설

- 외교부는 해외 체류 중인 탈북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한민족공동체팀’을 신설(8.28)
 - ‘한민족공동체팀’은 그간 탈북자 업무의 사안별 성격에 따라 대응 부서를 달리 했던 것에서 벗어나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탈북자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
 - 탈북자 업무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위해 동남아 지역의 공관 두 곳의 담당인원도 한 명씩 증원

러시아 벌목공 출신 등 탈북자 10명 입국

- 동아일보는 “모스크바 외곽 안가에 있던 북한 벌목공 등 10명이 순차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지난달 31일까지 입국을 완료했다”고 설명(9.3)
 - 탈북자들은 사할린 등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벌목공, 건설현장 인부로 일하다가 탈출한 사람들로, 길게는 1년간 러시아 안전가옥에 억류
 - 억류 기간 중, 탈북자들의 한국행에 엄격한 러시아 정부로 인해 일부 탈북자들은 제3국행을 시도·계획
 - 탈북자들의 한국행의 배경에는 러시아 정부의 전격적 조치가 있는 것으로 추측

서울시, 탈북여성 폭력피해 상담센터 운영

- 서울시는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탈북 여성들의 국내 정착 지원 일환으로 탈북 여성들이 겪은 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치유센터를 운영(9.4)
 -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우수기관 두 곳을 전담 센터로 지정
 -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은 개별 심층상담, 집단상담, 북한이탈지원기관 및 쉼터 연계 등이며, 상담을 원하는 여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각 센터에 탈북 여성을 동료 상담원으로 한 명씩 배치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대책' 발표

- 서울시는 공공인력 채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10.10)
 - 채용 면에서 공공기관에서 탈북자의 채용을 현재 수준에서 5배가량 증가시킬 계획이며, 서울 거주 탈북자에게 전입 민원 원스톱 처리 및 생활기반 마련 지원을 약속
 -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탈북과정에서 얻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및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 내용도 포함
 - 지하상가와 가로판매대 배정 때 탈북주민도 우선권 부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탈북 여성, 간첩 혐의 실형 선고

- 수원지법 형사2부는 위장 탈북하여 반복활동을 하는 탈북자들의 소재 파악을 시도한 A씨에게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10.13)
 - 재판부는 북한 보위사령부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및 수집하려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위장 탈북이 발각돼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 A씨는 "명령을 거절할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이 죽거나 신체적 피해를 볼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죄를 주장

북한, 탈북자 자백운동 전개

- 일본 마이니치(毎日) 신문은 자체입수한 조선노동당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이 올봄 탈북자 자백운동을 전개했다고 보도(10.16)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적의 반공화국 정찰·모략책동을 철저히 때려 부수라"고 지시하면서 탈북자 귀환 및 범죄 고백을 촉구

재단, 탈북자 도강비 지원 의혹

- 한겨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내부 문서를 확인한 바, 2012년 7월 초에 한 탈북자단체로부터 탈북 예정인 북한 주민들의 탈북 비용 지원 요청이 있었다고 보도(11.1)
 - 재단 사무총장은 "서류 작성상 실수로 '도강비'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북한 내 주민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설명

북한, 2차 탈북 차단 감시·통제 강화

- 데일리NK는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도(道) 내 분주소의 지시에 따라 인민반장들이 행불자가 있는 가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11.4)
 - “탈북한 가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수시로 보안원이 드나드는데 해당 집과 가까운 척하면서 매일 가족의 인원수를 확인한다”고 설명
 - 또 다른 소식통은 “행불자와 탈북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자, 이들을 통한 2차 탈북을 막기 위해 탈북자가 있는 가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

인권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11.5)
 -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
 -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후 1년 경과 후 보호를 신청할 경우 보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개정 추진도 권고

탈북자 지원금 부정 수급 관련자 처벌

- 대구지법 형사3부는 탈북자에게 가짜 직업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준 직업훈련원 원장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억 8천여만 원, 범행에 가담한 탈북자 5명에게 각각 징역 4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11.6)
 - 최 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4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50~200만 원을 받고 가짜 직업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주어 통일부에서 직업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범행 주도

탈북자 일행 15명, 중국 쿤밍에서 체포

- 탈북자 13명과 안내 조선족 2명 등 총 15명이 15일경 북-중 접경지역을 관리하는 랴오닝(遼寧) 성 소속의 사복 공안에게 쿤밍에서 체포(11.18)
 - 탈북자들은 동남아 국가로 이동하기 전 쿤밍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체포
 - 외교가에서는 랴오닝 성 공안이 대륙을 종단해 국경을 넘기 직전 이들을 체포한 것으로 보아 탈북 루트와 협조자 색출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

- 미국 정부는 쿤밍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강제복송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의 인권이사회 제출을 고려(11.19)
- 미국 국무부는 중국 정부에 강제복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주변 국가들이 탈북자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
-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담당 세드릭 사페이(Cedric Sapey) 공보 담당은 쿤밍에서 체포된 탈북자 문제를 2014년 3월에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언급
- 우리 정부는 쿤밍에서 체포된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송환하지 않을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11.21)

중국, 쿤밍 이외 지역들에서도 탈북자들 체포

- 조선일보는 중국 내에서 탈북지원활동가들의 발언을 빌려, 베이징(北京) 및 선양(瀋陽), 옌지(延吉), 단둥(丹東) 등지에서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체포돼 복송되었다고 보도(11.21)
 - 지난 7일 베이징 부근에서 탈북자 5명이公安 검문에 걸려 체포돼 하루 만에 복송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선양에서는 7명, 옌지 및 단둥에서도 십여 명의 탈북자가 체포

현대중공업, 탈북청년의 전문기술교육 예정

- 현대중공업은 이북5도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탈북청년들에게 전문기술직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기술연수생 입교를 추진(11.30)
 - 연수생은 교육 후 현대중공업 협력사에 채용되며, 채용 후 근무성적이 높을 경우 현대중공업 본사 지원 기회를 얻게 될 예정

하나원과 북부지방산림청, 탈북자 정서안정 지원 협약 체결

- 하나원과 북부지방산림청은 탈북자의 정서안정과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2.12)
 - 업무협약의 내용은 하나원 교육생 대상의 사회적응교육과 북부산림청의 숲 체험 프로그램의 연계 운영을 골자
 - 하나원 교육생 이외의 일반 탈북자들에게도 숲을 활용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약속

경기도, 2014년 탈북자 공무원 채용 확대

- 경기도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시·군, 산하기관 등의 수요 조사 뒤 채용인원을 확대하여 결정할 방침(12.16)
 - 산하기관 평가 시 탈북자 채용률을 평가기준에 반영하기로 함으로써 탈북자 채용이 없는 시·군도 탈북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할 계획
 -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탈북자 전담팀을 두고 있는 경기도는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웃도는 40명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

검찰, 탈북자로 구성된 마약 밀수조직 적발

- 울산지검 특수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탈북자 6명을 적발, 4명을 구속기소했으며, 판매자 1명을 검거, 해외 활동 중인 부부 2명을 지명수배(12.18)
 - 적발된 마약 밀수조직은 전원이 탈북자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이 밀수하던 필로폰의 규모는 소매가 18억 원 상당에 1만 8천 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정도
 - 시민 제보에 근거, 검찰이 10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으며, 하나원에서 범행을 모의해 필로폰을 밀수입·밀수출 및 소지한 일당을 검거

탈북자 부부, 필로폰 보관 및 투약 혐의

- 서울 양천경찰서는 탈북자 부부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인을 구속, 남편을 불구속 입건(12.18)
 - 부부는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옆집 수도계량기에 넣어 보관·투약해왔으며, 옆집 주인이 수도계량기 속에 보관하던 집 열쇠를 찾다가 발견해 신고하면서 발각

〈탈북자 재입북〉

탈북자 2명, 재입북 후 좌담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탈북자 박진근 씨와 장광철 씨가 북한으로 귀환해 좌담회가 진행되었다고 30일 보도(9.30)
 - 박 씨는 한국에서 “탈북자들은 어디 가나 참을 수 없는 천대와 수모를 받는다”며 “절망에 빠진 탈북자들은 범죄와 자살의 길로 굴러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
 - 장 씨는 “인신매매 거간꾼들은 나와 같은 사람들을 남조선으로 끌어갈 때 그 비용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계약서를 쓰게 하는데 유괴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빚단련을 받게 된다”고 언급

- 통일부는 “현재까지 한국에 정착했다가 재입북한 탈북자는 이들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이 중 2명은 다시 입국하여 총 10명이 북한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10.1)

탈북 여성, 재입북 후 좌담회 보도

-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탈북자 최계순 씨가 북한으로 귀환해 북한에 돌아온 주민들과 좌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보도(12.20)
 - 이들은 최계순 씨가 중국 헤이룽장(黑龍江) 성에 사는 언니를 찾아갔다가 2011년 12월 인신매매 끈들에 의해 남한에 납치되었다고 주장
 - 최 씨는 “남조선 사회라는 것은 인간의 정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사회라고 비난
 - 통일부는 성명, 나이 등 인적사항과 출국 기록 등에 비춰볼 때 탈북자의 재입북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설명(12.21)

〈탈북자 재입북 시도〉

탈북 인권운동가 손정훈, 월북 선언

- 탈북 후 한국에서 10년 동안 인권운동가로 활동한 손정훈 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7.15)
 - 손정훈 씨는 북송된 친형의 총살형을 막지 못했고, 다른 탈북자의 브로커 비용을 떠안았으며, 본인도 간경화 말기로 시한부 선고받은 상황
 - 통일부는 손정훈 씨의 방북 승인 신청을 위한 방문에 북한의 ‘초청장’이 없으면 방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찰은 손정훈 씨의 출국을 금지(7.24)

탈북자, 재입북 시도로 구속기소

- 광주지검公安부는 남한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재입북을 시도한 탈북자 A씨를 구속기소(7.16)
 - A씨는 동료 탈북자들의 신상을 가지고 중국을 통한 입북을 시도하다가 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부산과 일본을 거쳐 입북 시도
 - 광주지법 형사1부부는 동료 탈북자의 개인 정보를 챙겨 일본을 통해 재입북하려던 탈북자 허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9.29)
 - 재판부는 탈북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북한으로 탈출하려다 발각되자 다른 탈북자를 제보자로 의심·협박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탈출이 미수에 그쳤으며,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점으로 고려해 양형 결정

- 항소심에서도 허 씨에 대해 원심 유지 판결(12.9)

60대 탈북자, 탈북자 정보 소지 재입북 시도

-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북한 보위부에 넘길 목적으로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챙겨 재입북 시도한 김 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8.20)
 - 재판부는 “다른 선량한 탈북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고 대한민국 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뇌졸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죽기 전 북한에 있는 아내와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과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사기 대출 재입북 시도 탈북자 구속

-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허위아파트 매매 계약서로 억대의 사기 대출을 받아 재입북하려던 50대 탈북자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12.15)
 - 김 씨는 허위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2억 6천만 원을 사기 대출을 받아 인천항을 통해 재입북을 시도
 - 대출 브로커 송 씨와 사기 대출 후 도피하려던 김 씨는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을 알고 밀항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검거

〈해외 입국자〉

캐나다, 위장 탈북난민 문제 현안 부상

- 캐나다 언론에서 탈북자들의 캐나다 내 난민 신청 급증 배경을 문제 삼았으며, 캐나다 이민국은 신원조회를 강화(8.9)
 - 캐나다 신문 ‘라프레스’는 2012년 한 해 동안 캐나다 난민신청자 중 북한 국적자가 7백 명이 넘으며, 이들이 한국 여권 소지자일 가능성을 제기
 - 캐나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자 중 아직도 수백 명이 심사 대기 중
 - 캐나다 이민국은 한국과 칠레를 특별 관심국가(designated countries of origin)로 추가 지정해, 두 나라 출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 캐나다 내 북한관련 단체들은 ‘위장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은 국제사기와 같으며, 순수한 제3국 내 탈북자들의 캐나다 정착을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를 표명

캐나다, 입국 탈북자 급감

-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의 난민입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에 난민으로 수용된 탈북자의 수는 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10명이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데 비하여 급감(9.26)
 - 캐나다가 탈북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총 483명의 탈북난민을 수용
 -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130명의 난민신청자 중 60명의 난민 심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심사 대상 중 11명은 탈락, 17명은 신청 철회, 11명은 심사 불출석

미국 국무부, “미국 입국 탈북난민수 163명”

- 미국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이 발표한 난민입국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난민의 수가 총 163명으로 증가(10.1)
 - 2013 회계연도인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 말까지 미국은 총 17명(12월 3명, 2월과 3월에 각각 4명, 4월과 6월에 각각 1명, 7월 3명, 9월 1명)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

〈김광호 씨 가족 재탈북〉

탈북난민인권연합회, 재입북 일가의 재탈북 사실 제기

- 탈북난민인권연합회는 재입북자인 김광호·김옥실 부부가 6월 27일경 딸과 김옥실 씨의 동생 2명과 함께 탈북하여 중국 옌벤(延邊) 지역에서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제기(7.14)
 - 정부는 중국 측에 김광호 씨 가족의 체포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이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통보(7.18)
 - 정부는 북송 저지 입장을 보였으며, 5명 중 한국 국적을 가진 3명에 대해 영사 면담을 정식 요청
 - 한국 국적이 없는 다른 가족 2명도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전달

김광호 씨 가족, 일부는 한국행, 일부는 북송

-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었던 김광호 씨 일가 5명 중 한국 국적이 있는 김광호-김옥실 부부 및 그들의 딸은 한국행이 성사되었으나, 김옥실 씨의 동생 2명은 북송된 것으로 추측(8.19)
 - 김광호-김옥실 부부 및 딸의 한국행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미 8월 15일경 한국에 입국했다는 주장이 제기
 - 반면에 한국 국적이 없는 김광호 씨의 처제·처남은 20여 일 전 분리수감되어 10여 일 전 투먼의 변방대로 보내졌으며, 북송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

재탈북자 김광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잠입·탈출 등)로 기소된 탈북자 김광호 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12.20)
 - 재판부는 김 씨가 입북할 당시 이미 보위부의 조사를 거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월북 당시 “그곳에서 살 목적으로 갔고 그러려고 보위부에 협조했다고 보여 김 씨가 강압에 의해 기밀을 털어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유죄 판결

〈미얀마 탈북자 억류설〉

북한인권개선모임, 탈북자 수십 명 미얀마 억류설 제기

- 탈북자단체 북한인권개선모임의 김희태 사무국장은 미얀마·중국·태국 접경지역 타치렉(Tachilek)에서 80km 떨어진 미얀마 반군 관할지역에 탈북자 64명이 억류되어 마약 제조, 노예 노동 등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7.12)
 - 김 사무국장은 “남성 탈북자들은 양귀비 농사를 짓고, 여성 탈북자들은 마약 가공공장과 술 공장에서 일하며 성매매까지 강요당한다”고 문제 제기
 - 미얀마 반군 측에서 탈북자 1인당 5천 달러의 몸값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개선모임은 탈북자 구출활동 전개를 예고하며 정부의 구출활동을 촉구

정부, 탈북자 미얀마 억류 사실 여부 확인

- 정부는 김해용 주미얀마 대사를 네피도(Naypyidaw)로 급파하여 탈북자 60여 명의 미얀마 반군에 의한 억류 사실 여부를 파악(7.15)
 - 김 대사는 탈북자 집단억류설 확인을 위해 미얀마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주 정부 등의 협조도 구하며, 타치렉 인근 지역의 추후 방문도 타진

미얀마 반군, 탈북자 억류설 부인

- 미얀마 반군단체는 현지 언론과 한국 재외공관과의 접촉을 통해 국내 탈북자단체가 제기한 탈북자 수십 명의 억류에 대해 부인(7.25)
 - 탈북자 억류 관련 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와주 반군의 대변인은 현지 공관에 “64명의 탈북자가 억류돼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
 - 정부는 억류설 제기 지역이 반군 관할 지역으로 산세가 험해 접근이 어렵다는 점 등을 토대로 지속적인 사실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방침

2. 납북자

정부, 켈로부대 출신 납북자에 무공훈장 수여

- 정부는 6·25전쟁 당시 미군 산하 대북첩보부대인 켈로부대 출신의 납북자에게 처음으로 화랑무공훈장을 수여(7.1)
 -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전쟁 당시 미국 극동사령부 산하 특수부대 켈로부대 소속의 부친 최원모 씨를 대신해 훈장 수훈
 - 1967년 6월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하던 ‘풍복호’ 납북 시 납치당한 선주 최 씨는 다른 선원들과 달리 1970년 처형된 것으로 추정

통일부, 전시납북자 신고 저조

- 통일부는 2011, 2012년 전시납북자 신고를 받았으나 매년 5,000~6,000명이라는 정부의 목표 및 예상치를 크게 밑돌아 20% 내외에 불과(7.4)
 -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1년에는 1,034명, 2012년에는 1,623명이 전시납북자 신고를 접수했으며, 실제 납북자 인정은 319명, 929명으로 절반 수준
 - 통일부는 사업 초기이며 납북자 결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고, 신고인 등이 사망했거나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 납북 피해자 논의차 베트남 방문

-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은 쯤 다이 꾸앙 베트남公安부 장관과 만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베트남의 협조를 요청(7.29)

- 후루야 담당상은 납치 문제의 미해결 시, 대북지원 재개나 대북제재의 해제는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
- 꾸앙 장관은 북한 고위관리들과의 접촉 시 일본의 입장 전달을 약속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각국의 납북자 가족 접촉

-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황인철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 등 국내 납북자 가족들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증언(8.23)
 -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들에게 한국 정부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어떤 조사와 지원을 했는지 질문
-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 씨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横田滋, 80) 씨 등 일본 납북자 가족들이 도쿄에서 개최된 청문회에서 증언(8.30)
 -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혐의 가운데 납치 문제 등에 대한 증언과 자료 수집을 위해 이를 일정으로 청문회 개최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태국 방콕 방문 시, 지난 1978년 마카오에서 실종되어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인 아노차 판조이 씨의 가족을 면담(9.20)

일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납북자 문제 논의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방일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에 북한이 자행하는 '심각'하고 '조직화'된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과 일본의 외교관계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아베 총리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8.28)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납치문제를 이번 정권에서 완전히 해결할 생각"이라는 입장표명(교도통신, 8.30)
 - 아베 총리는 납치피해자 전원 귀국, 납치범 송환을 원하는 일본 정부의 생각 피력
 - 커비 위원장은 납치 문제에 관해 실제 피해자의 숫자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대단한 수수께끼"라며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초안을 북한에 보내 반론 기회를 주겠다고 언급

납북 선원 전옥표 씨, 탈북 후 귀국

- 1972년 납북된 오대양 61, 62호의 선원 전옥표(68) 씨가 납북된 지 41년 만에 8월 초

탈북하여 국내 입국(9.13)

- 전 씨는 당초 오대양호 남북 선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아 납북자에 포함돼 있지 않다가, 2005년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입수한 납북어부 37명이 1974년 북한 묘향산에서 찍은 단체사진에서 확인되어 2010년 납북자로 인정

정부, 전쟁 납북자 295명 추가 지정

-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납북자 295명을 추가키로 하면서 공식적인 6·25전쟁 납북자 수는 총 2,560명(10.6)

한·일 납북자 50여 명, 평양서 특별 감시

-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마쓰모토 교코(松本京子)로 추정되는 일본인 여성 한 명과 한국인 50여 명 등 납북자들이 현재 평양에서 특별 감시를 받고 있다고 설명(교도통신, 10.14)
 - 지난해 4월 이후 납북자들이 평양 순안 지역으로 옮겨져 특별 감시를 받는 것으로 추정

정부, 유엔서 납북자·국군포로 귀환 촉구

- 이정훈 외교부 인권 대사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기초연설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한국전쟁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귀환을 촉구(10.30)

일본, 유엔서 납치 문제 해결됐다는 북한에 반박 서한 제출

- 요시카와 모토히데(吉川元偉)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 반박과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서한을 유엔 총회 의장에게 제출(10.31)
 - 북한 대표는 10월 9일 유엔 총회 발언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주장
 - 서한에는 납치 문제가 일본의 주권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표명
 - 또한 북한의 납치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를 촉구

6·25납북자가족 및 한변, 납북자 문제 관련 해외 활동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및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한변) 관계자 스위스 제네바 및 네덜란드 헤이그 방문
 -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전시납북자 문제의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 포함을 촉구(11.18)
 -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에 전시 납북자 35명의 생사확인 의뢰서를 제출(11.19)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및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 4명을 ICC에 제소(11.20)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에 납북 문제 포함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조사위원회 시오반 홉스(Siobhan Hobbs) 강제실종조사부문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 전시납북자 문제를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11.23)
 - 김 변호사는 ICC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번 전시 납북자 건은 ‘계속범(감금죄 등 구성요건적 행위가 위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범죄)’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도 들었다고 주장

통일부 장관, 귀환 납북자 6명과 간담회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전후 납북자 6명과 오찬 간담회 개최(12.4)
 - 귀환 납북자들은 북한에서의 생활, 국내 귀환·정착 과정 등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남은 납북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
 - 류 장관은 귀환 납북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과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언급
 - 통일부 장관이 전후 납북자들과 공식적으로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병기 주일대사, 일본인 납북자 가족 면담

- 이병기 주일대사는 일본인 납북자 가족 5명 면담(12.20)
 - 이 대사는 면담 후 지원 의지를 피력
 - 주일 대사가 일본인 납북피해자 가족과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

3. 국군포로

북송 국군포로 일가의 납측 가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 2006년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에서 한국 총영사관의 보호를 받다가 강제북송된 국군포로 일가의 납측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7.25)
 - 국군포로 이강산 씨(사망)의 동생 이강복 씨는 형의 남은 가족 3명이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만나 2006년 10월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신병을 인계
 - 그러나 영사관 측은 이 3명을 영사관이 아닌 민박집에 머물게 했고 결국 이들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
 - 이에 따라 “국군포로 가족의 보호를 소홀히 한 국가는 가족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계획

- (사)물망초는 북한이 납북자 및 국군포로를 강제로 억류하는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ICC에 제소할 계획 발표(8.28)
-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본부를 두고 활동해온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본격적인 국내 활동에 들어가면서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ICC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발표(9.24)
 - 단체는 ▲ICC에 김정은 제소 ▲국내 생존 국군포로에 훈장·포상 수여 ▲북한 생존 국군포로 송환 및 한국 가족과의 상봉·서신교환 등을 추진할 계획

국군포로 손동식 씨 유골 국내 송환

- 6·25전쟁 때 국군포로로 끌려가 지난 1984년 북한에서 숨진 손동식 씨로 추정되는 유골이 5일 국내에 송환(10.5)
 - 손 씨의 딸인 손명화(51) 씨는 2005년 탈북한 뒤 (사)물망초와 6·25 추념공원 건립 국민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중국을 거쳐 부친의 유골을 국내 송환하는 데 성공
- 국내 송환된 유해가 유전자(DNA) 감식 결과 국군포로 손동식 씨인 것으로 공식 확인(11.23)

- 국군포로 손동식 씨에 대한 보상금을 놓고 국방부와 유족이 갈등(11.28)
 - 유족 측은 생환 국군포로에 준하는 보상금 6억 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유골로 송환되어 유족연금 4천700만 원만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
- 탈북 여성 손명화 씨는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에 아버지의 유골을 들고 월북 시도하다가 체포(12.20)
 - 손 씨에 의하면 부친은 지난 84년 사망했으나 국방부가 사망 날짜를 전쟁 당시인 1951년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62년생인 손 씨는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지 못해 국군포로 가족으로 미승인
 - 또한 북에 있는 형제가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소식에 밀입북을 시도
 - 국방부는 원칙대로 처리했으며 손 씨만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논란이 커지자 국군포로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6·25 전사자 유전자 분석으로 10번째 신원 확인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 한국전쟁 전사자 유가족으로부터 채취한 유전자 시료를 분석해 10번째로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12.27)
 - 신원 확인 전사자는 1950년 6월 28일 강원도 춘천 인근 원창고개 전투에서 전사한 고 김세한 순경으로, 김 순경의 유해는 지난해 5월 유해발굴과정에서 수습

4. 이산가족

북한,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 제안

- 북한이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의를 제안(7.10)
 -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은 17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 실무 접촉은 19일 금강산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제의
 - 이에 대해 남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을 수용하되, 장소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북측에 수정제의

북한, 2개 회담 모두 보류

- 북한이 전통문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2개 회담 모두 보류(7.11)
 - 회담 보류에 대해 북측은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입장을 표명
 - 북한이 2개 회담 제의를 모두 보류한 데는 남한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추측

남북, 추석 이산가족 상봉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 남북 양측은 판문점 남측 지역의 ‘평화의 집’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8.23)
 - 실무접촉에서 양측은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추석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상봉 내용을 포함한 4개 항의 합의서를 채택
 - 합의서에는 ▲ 추석 이산가족 상봉 일정 및 규모 ▲ 화상상봉 진행 ▲ 11월 추가 이산가족 상봉 ▲ 상봉 정례화, 생사확인, 서신교환 실시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
 -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사 및 주소 확인 등에 대해 추가로 제시했으나 북측은 이에 대해 무반응

한국, 이산가족 상봉 1차 후보자 발표

- 대한적십자사는 9월에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의 1차 후보자 500명을 발표(8.24)
 - 1차 후보자를 대상으로 상봉의사 확인과 건강검진 실시 후 2차로 200~250명을 선발해 북측 적십자사와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할 예정
 - 생사확인 후 최종 상봉대상자를 100명으로 선정할 계획

남북, 이산가족 상봉 생사확인 의뢰 명단 교환

- 대한적십자사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한 조선적십자회와 이산가족 후보자 명단을 교환(8.29)
 - 남측 상봉 후보자는 250명이며, 북측은 200명의 후보자 명단을 전달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상봉 최종 명단 교환

- 대한적십자사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최종 명단을 북측과 교환(9.16)
 - 남측 대상자는 96명이며, 북측 대상자는 100명
 - 남측 대상자의 연령은 90세 이상 28명, 80~89세 48명, 70~79세 14명, 69세 이하 6명이고, 성별은 남성 62명, 여성 34명이며, 상봉할 북측 가족이 부부·자녀인 사람은 21명, 형제·자매 52명, 3촌 이상은 23명, 출신지역은 황해도 25명, 함남 15명, 평남 13명, 평북 12명 순
 - 북측 상봉 대상자는 연령별로는 90세 이상은 한 사람도 없으며, 80세 이상 75명, 70~79세 25명이고, 성별은 남성 77명, 여성 23명이며, 출신지역은 경기도 22명, 경북 20명, 충남 16명, 서울·강원 각 9명 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숙소 이견

-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 과정에서 남북 양측이 남측 상봉단의 금강산 내 숙소 문제로 이견을 표출(9.20)
 - 남측은 고령 이산가족의 편안하고 안전한 상봉을 위해 외금강·금강산 호텔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
 - 이에 반해 북측은 외금강·금강산 호텔이 관광객 예약이 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5년간 사용되지 않았던 해금강 호텔 및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사용한 이력이 없는 현대생활관 등 2곳을 숙소로 제시

북한, 이산가족 상봉 연기

- 북한 조평통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대변인 성명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연기를 돌연 발표(9.21)
 - 성명에서는 최근 남북관계의 성과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결과’니,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결실이라고 떠들고 있고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돈줄’ 등을 언급하며 중상했다”고 주장

미 한인들, 미 적십자에 이산가족 상봉 촉구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워싱턴지회는 미국 적십자사 본부를 방문해 북한의 가족과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촉구(10.9)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민명기 워싱턴지회장 및 관계자들은 적십자사의 국제업무와 가족연결 사업 담당자를 만나 가족 상봉을 위한 북한 적십자사와의 협의를 요청

한적, 올해 이산가족 영상편지 2천 편으로 줄여 제작

- 대한적십자사는 올해 이산가족 영상편지 2천 편을 제작(10.30)
 - 통일부와 한적은 2012년부터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전달할 영상편지 제작 사업 진행
 - 2012년 800명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3년 동안 매년 5~6천 명씩 촬영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제작규모를 축소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 문화재청에 따르면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2014년 3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할 기록물로 확정(11.26)

5. 분석 및 평가

재중 탈북자 단속·체포 강화

- 탈북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주요 이동 경로인 쿤밍 등에서 탈북자의 체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입국 주선 등을 미끼로 보위부 출신 탈북자가 탈북자를 유인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중국 등 현지 탈북자 입국지원 활동이 크게 위축됨.
 - 국내입국 이후 중국에 가서 보위부 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탈북자들의 강제복송을 돕던 탈북자에게 국내 재판부에서 실형 선고

재입북 사례 지속

- 재입북한 탈북자들의 좌담회의 북한매체 보도가 상반기에 이어 지속되었으나, 일부는 재탈북을 시도하면서 이들의 강제송환금지 노력과 함께 입국 이후 처벌이 현안으로 제기됨.
 - 국적자에 대해서는 강제송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함.

- 탈북자들이 사기대출 및 탈북자 정보를 소지하고 재입북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례가 발각되어 처벌을 받음.
 - 또한 인권운동가를 자처하여 재입북 의사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짐.

탈북자 범죄활동 처벌

- 국내입국 탈북자들이 마약소지 및 거래 등 범죄활동에 연루되면서 처벌받는 사례들이 발생함.
 -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하나원 사회적응 이수과정에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탈북자 준법교육 필요성이 강조됨.
 - 국가보안법 위반사례들도 지속적으로 발생
 - 이로 인해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국내입국 탈북자 해외난민수용 감소

- 국내입국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이 유럽 및 캐나다 등 제3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여 왔으나, 관련국들이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서 수용률이 감소하고 있음.
 - 특히 캐나다가 심사절차를 강화하면서, 수용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
 - 이는 영국 등 유럽국가의 난민수용절차 강화로 캐나다로 탈북자들의 망명이 급증한 현실적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납북자 관련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안 필요

- 납북자 문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안 마련 필요
 - 전시 납북자 문제 실태 조사와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마련 및 정책적 대안 제시
 - 전후 납북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주기적 면담을 통한 납북자 문제 인도주의적 해결 확대

인도적 문제의 종합적 해결 지속 모색

-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한 남북한 상설협의체 구성 필요
 -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아온 것이 사실임.

- 정부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중심으로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남북 간 상설협의체 구성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음.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현 정책을 제고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함.



제8권 2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NORTH KOREAN HUMAN RIGHTS